

· 해설 내용은 개정된 법령(2022. 7월 기준)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. 지방자치론 전체 기출문제(2012~2021년)는 네이버카페 '김재준 행정학'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

문 1.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, 이를 조정·협약하기 위하여 행정협의 조정위원회를 둔다. 다음 중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은?

- ① 기획재정부장관
- ② 안전과 관련된 시·도지사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
- ③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전국 시·도지사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
- ④ 법제처장

문 2.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및 채권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자치단체조함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없이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.

정답 및 해설

1. ③

· 지방자치법 제168조 제3항: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, 위원장은 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.

1. 기획재정부장관, 행정안전부장관, 국무조정실장 및 법제처장
2. 안전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
3. 그 밖에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4명

※ 전국 시·도지사협의회는 현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로 명칭이 바뀌었다.

2. ②

·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3항: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.

문 3. 「지방공무원법」상 인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-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단체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.
- ② 인사위원회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 의결·집행기관이다.
- ③ 지방의회의 현직 의원은 인사위원이 될 수 없으나, 정당의 당원은 인사위원이 될 수 있다.
-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.

문 4.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- ① 1991년에 시행된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이 동시에 선출되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형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가 분리된 기관분리형이다.
- ③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주민투표·주민발의·주민소환제도가 채택되지 않았다.
- ④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계층이 2계층인 중층제이다.

정답 및 해설

3. ①

· ② 인사위원회는 인사에 관한 일정한 사무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로부터 독립하여 결정할 수 있다.

· ③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6항: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.

1.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2. 「정당법」에 따른 정당의 당원
3. 지방의회의원

· ④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7항: 제5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.

4. ②

· ① 1991년도에 시행된 지방선거에서는 주민직선으로 지방의회만 구성하였고,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이 동시에 선출된 선거는 1995년에 처음 시행되었다.

· ③ 현행 지방자치법 제18조(주민투표), 제19조(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), 제25조(주민소환)에서 채택하고 있다.

· ④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계층은 단층제이다.

문 5. 지방자치권의 근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- ① 고유권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국가로부터 주어진다고 본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의 창조물로 보는 준독립설은 고유권설의 하나이다.
- ③ 전래권설에서는 자치권을 지방자치단체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본다.
- ④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정치적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보는 순수탁설은 전래권설의 하나이다.

문 6.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- ㄱ. 예산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.
- ㄴ. 중앙 정부의 입법에 의해 처음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었다.
- ㄷ. 주민의 참여 절차는 「지방자치법」에 규정되어 있다.
- ㄹ. 지방의회는 예산심의권과 충돌할 수 있다.

- ① ㄱ, ㄷ
- ② ㄱ, ㄹ
- ③ ㄴ, ㄹ
- ④ ㄷ, ㄹ

문 7. 지방자치단체의 설립목적에 중심으로 자치단체의 종류를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한다. 다음 중 보통지방자치단체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- ① 서울특별시
- ② 대구·경북 경제자유구역청
- ③ 세종특별자치시
- ④ 청주시

문 8. 다음 중 아른슈타인(Arnstein)이 분류한 주민참여 8단계론에서 비참여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?

- ① 회유 - 권한위임
- ② 조작 - 자문
- ③ 정보제공 - 자문
- ④ 치료 - 조작

정답 및 해설

5. ④

- ① 전래권설에 대한 설명이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의 창조물로 보는 것은 전래권설에 대한 설명이다.
- ③ 고유권설에 대한 설명이다.

6. ②

- ㄴ. 2004년 광주광역시 복구 의회가 최초로 조례로 도입한 후 2011년 지방재정법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.
- ㄷ. 주민참여예산제도 근거 및 절차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.

정답 및 해설

7. ②

-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지방자치단체조합에 해당한다. 다만 일부 학자들은 우리나라의 조합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보고 있으나, 지방자치법이 개정·시행되면서(2022. 1. 13.) 지방자치단체조합과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.

8. ④

- 아른슈타인이 분류한 주민참여
 1. 비참여: 조작(계도, Manipulation) < 임시치료(교정, Therapy)
 2. 형식적 참여: 정보제공(Informing) < 상담(Consultation) < 회유(유화, Placation)
 3. 주민권력적 참여(실질적 참여): 대등협력(Partnership) < 권한위임(Delegated power) < 자주관리(Citizen control)

문 9. 지방선거에서 중·대선거구제의 도입을 찬성하는 논거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?

- ① 소지역 중심의 정치적 이기주의를 방지할 수 있다.
- ② 후보자와 유권자의 접촉이 용이하여, 지역주민들의 정치적 소외를 방지할 수 있다.
- ③ 조직기반이 강한 지역정치인보다는 정책지향성이 높은 유능한 인사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.
- ④ 여성과 소수정당 출신의 후보들을 당선시킬 수 있으므로, 지방정부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다.

문 10. 「지방자치법」상 조례와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규칙으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
- ③ 시·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·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문 11. 우리나라 특별교부세의 교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- ①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한다.
- ② 국가적 장려사업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한다.
-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.
- ④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한다.

문 12.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지방의회에서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소(訴)를 제기할 수 없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.

정답 및 해설

11. ②

- ① 지방교부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: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: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
- ③ 지방교부세법 제9조 제2항: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. 다만,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.
- ④ 지방교부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: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: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
- ※ 2022년 기준 행정자치부 → 행정안전부로 조직개편

12. ③

-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3항: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(訴)를 제기할 수 있다.

정답 및 해설

9. ②

- ② 소선거구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.

10. ①, ②(기존 정답 : ①)

- ① 지방자치법 제34조 제1항: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법 제29조(규칙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

※ 지방자치법이 개정·시행(2022. 1. 13.)되면서 규칙의 제정범위가 넓어졌다.

문 13. 「지방자치법」상 보조기관과 하부 및 소속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- ① 자치구가 아닌 구에 읍, 면, 동을 직속기관으로 둘 수 있다.
- ②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인구와 관계 없이 2명의 부단체장을 둔다.
- ③ 서울특별시는 3명의 범위 내에서 부단체장을 둔다.
- ④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관으로 소방 및 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

문 14.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지방정부 예산 규모에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.
- ② 지방재정자립도는 의존재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높게 나타난다.
- ③ 일반재원의 비중이 커지면 지출 선택범위가 넓어져 재정운영의 자주성과 탄력성이 커진다.
- ④ 재정자립도가 같으면 그 두 자치단체 간 재정규모도 같다고 할 수 있다.

문 15. 지방의회의 소집과 회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정례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.
- ② 현행법상 휴회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.
- ③ 정례회의 회기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④ 지방의회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문 16. 「지방자치법」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사임하려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미리 사임일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,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(在任)은 2기에 한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면 각급 법원장은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.
- ④ 체포 또는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으면 관계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.

정답 및 해설

13. ③

- ① 직속기관은 지방자치단체만 둘 수 있다. 또한, 읍, 면, 동은 하부기관에 해당한다.
- ②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의 경우 부단체장 정수는 3명으로, 경기도의 경우 부단체장이 3명이다.
- ④ 소방 및 교육훈련기관 등은 직속기관이다.
※ 지방자치법 제126조(직속기관): ...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(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), 소방기관, 교육훈련기관, 보건진료기관,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.

14. ④

- 재정자립도는 [자주재원(지방세 + 세외수입) / 일반회계 총세입] 비율로 표현되므로, 자치단체 간 절대적 재정규모를 비교할 수 없다.

정답 및 해설

15. ①

- 지방자치법 제53조 제1항: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.

16. ②

- 지방자치법 제108조: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,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(在任)은 3기에 한한다.

문 17.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- ① 특별시장 등은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해서는 안 된다.
- ② 서울특별시의 지위·조직·운영에 대하여는 수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.
- ③ 서울특별시는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하여 정부의 직할로 두지 않는다.
- ④ 서울특별시·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행정, 재정운영 등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둘 수 있다.

문 18.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행정청의 위법·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직무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조기관으로는 소속공무원, 부시장, 부지사, 구청장, 동장, 면장 등이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소환투표에 의해 소환이 확정된 경우 그 직을 상실하나, 그 보궐선거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임·위탁할 수 있다.

정답 및 해설

17. ④

- ① 지방자치법 제196조: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「지방재정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야 한다.
- ②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로 정한다.
- ③ 지방자치법 제3조 제2항: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, 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는 정부의 직할(直轄)로 두고,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, 군은 광역시, 특별자치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,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,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.

18. ④

- ① 직무이행명령은 국가위임사무나 시·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일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주무장관이나 시·도지사가 할 수 있다. 위법·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이나 시·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.
- ②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, 읍에 읍장, 면에 면장, 동에 동장은 하부행정기관의 장에 해당한다.
- ③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3조(주민소환투표의 효력) 제2항: 그 직을 상실한 자는 그로 인하여 실시하는 이 법 또는 「공직선거법」에 의한 해당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.

문 19.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, 설치, 분리, 통합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조례로 정한다.
- ③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의 명칭과 구역을 폐지, 설치, 분리, 통합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통합할 때에는 행정자치부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.

문 20. 「지방자치법」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가 아닌 것은?

- ① 예산의 편성·집행, 공유재산관리
- ② 도서관, 운동장, 광장, 체육관 등 공공교육·체육·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③ 물가정책·근로기준 등의 운영
- ④ 보건진료기관의 설치·운영

정답 및 해설

19. ①

- ② 지방자치법 제5조 제2항: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중 관할 구역 경계변경(이하 “경계변경”이라 한다)과 지방자치단체의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
- ③ 지방자치법 제7조의 제1항: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④ 지방자치법 제8조 제1항: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.

※ 2022년 기준 행정자치부 → 행정안전부로 조직개편

20. ③

- 지방자치법 제15조(국가사무의 처리제한):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.
 1. 외교, 국방, 사법(司法),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
 2. 물가정책, 금융정책,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
 3. 농산물·임산물·축산물·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
 4.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, 국가하천, 국유림, 국토종합개발계획, 지정항만, 고속국도·일반국도, 국립공원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
 5. 근로기준,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
 6. 우편, 철도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
 7.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·시험·연구, 항공관리, 기상행정, 원자력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